

#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4232 |
|----------|------|

발의연월일 : 2024. 9. 24.

발 의 자 : 황명선 · 정진욱 · 박수현  
윤건영 · 박홍배 · 이재관  
박해철 · 강준현 · 이광희  
송재봉 · 허성무 · 오세희  
이병진 · 장종태 · 양부남  
임미애 의원(16인)

##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석탄발전소 폐지 정책은 해당 지역사회와 관련 산업 구조, 근로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여야 하나, 석탄발전소 폐지 등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이행으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 지원 및 해당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해당 지역과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가 계획 수립·이행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기반이 요구됨.

또한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전폭적인 재

정 지원을 통하여 실효적인 정책이 시행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을 제정하여 석탄발전 산업의 전환 과정에의 피해 지역과 근로자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명시함(안 제1조).

나. 피해지역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피해지원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피해지역에 대한 효율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라.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피해 예방 또는 복구 지원을 위하여 석탄 폐지 피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대상을 규정함(안 제9조).

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피해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국·공유재산의 대부, 국고보조금 보조율 및 계약방법의 특례 사

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 또는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탄발전소”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 따른 발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시설을 말한다.
2. “석탄발전소 폐지”란 1호의 시설이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동이 중단되는 상태를 말한다.
3. “피해지역”이란 석탄발전소 폐지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거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석탄발전소 근로자”란 석탄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주, 협력사 및 자회사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정된 지역 및 석탄발전소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관

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피해지역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피해지역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에너지 전환 등 관련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되,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4.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대표
5. 피해 당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들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⑦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피해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피해지역과 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피해지역지원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지원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피해지역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피해지역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피해지역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피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석탄발전소 폐지가 완료 또는 예정된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석탄폐지 피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인구의 현저한 감소 또는 주거환경의 악화가 현저한 지역
2. 석탄발전소 폐지 전 후 산업구조의 변화가 발생한 지역
3. 해당 지역 내 사업체의 생산, 매출 및 고용현황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었거나 예상되는 지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지역의 선정계획, 조사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피해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2. 정부 출연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차입금

6.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따른 수입금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체 산업 육성, 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설 확충 등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 안정,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석탄발전소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재취업 지원 등 고용안정  
및 촉진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피해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⑤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  
산·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대부·사용허가 및 매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는 피해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피해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피해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